

## 19대 대선 기간 후보자 간 의혹제기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 팩트체크 뉴스 판정결과와 지지후보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Fact-check News on Political Allegations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  
Persuasion or Boomerang Effect?

---

저자 (Authors)	김선호, 백영민 Sonho Kim, Young Min Baek
출처 (Source)	<a href="#">언론정보연구 55(1)</a> , 2018.2, 161-194(34 pages) <a href="#">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5(1)</a> , 2018.2, 161-194(34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a>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365812">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365812</a>
APA Style	김선호, 백영민 (2018). 19대 대선 기간 후보자 간 의혹제기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 효과. <a href="#">언론정보연구</a> , 55(1), 161-194
이용정보 (Accessed)	서울대학교 147.46.43.*** 2019/08/08 16:0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19대 대선 기간 후보자 간 의혹제기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

팩트체크 뉴스 판정결과와 지지후보를 중심으로\*

###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kimsonho@kpf.or.kr (주저자)

### 백영민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부교수 ymbaek@yonsei.ac.kr (교신저자)

본 논문에서는 대통령 선거기간 특정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에 대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가 팩트체크 뉴스 보도를 접한 후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온라인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험은 다음과 같은 과정과 설계를 통해 진행되었다. 우선 실험참여자에게 후보자가 제기한 의혹을 제시한 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주관적 동의수준을 측정하였다. 이후 해당 의혹을 검증한 팩트체크 뉴스를 제시한 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주관적 동의수준을 반복측정하였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주관적 동의수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실험요인으로는 (1)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방식('사실', '거짓', '사실반 거짓반'), (2) 의혹 제기상황('문재인 후보의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 '문재인 후보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 '홍준표 후보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 '안철수 후보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 (3) 미디어 이용자의 지지후보('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기타후보')를 설정하였다. 3원분산분석 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미디어 이용자의 판단은 의혹제기상황, 지지후보 여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NRF-2016S1A3A2925033). 논문 심사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립니다.

부에 상관없이 팩트체크 뉴스가 판정결과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팩트체크 뉴스가 제기된 의혹을 사실이라고 판정한 경우 제기된 의혹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거짓이라고 판정한 경우 제기된 의혹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사실반 거짓반’으로 판정한 팩트체크 뉴스를 접한 미디어 이용자는 제기된 의혹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혹은 ‘거짓’으로 판정한 팩트체크 뉴스는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반 거짓반’으로 판정한 팩트체크 뉴스를 접한 미디어 이용자의 모습은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 경향을 실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팩트체크 뉴스의 가능성과 잠재적 한계도 아울러 논의하였다.

## KEYWORDS

팩트체크 뉴스 · 설득효과 · 부메랑효과 · 부정성 편향 · 저널리즘 가치 · 정치적 의혹

## 1. 서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짜뉴스(fake news), 유언비어(rumor), 허위정보(misinformation) 등이 중요한 사회 정치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황용석 · 권오성, 2017), 이에 대한 대안중 하나로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주목받고 있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이란 정치적 의혹제기나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판정하는 새로운 저널리즘 장르로서, 지식을 갖춘 시민사회(informed citizenry)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Graves, 2016). 전통적 시민사회 모델에 따르면 저널리스트는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대화를 나누며 합리적인 정치적 의견을 형성한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현실 시민의 모습은 전통적 시민사회 모형과 부합하지 않는다. 현실의 시민은 정치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을뿐더러, 정치적 대화를 나누더라도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만 의견을 교환하며, 개인의 성향이나 개인을 둘러싼 네트워크의 성향에 따라 기본적인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Patterson & Seib,

2005; Shapiro & Bloch-Elkon, 2008). 더구나 수많은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환경에서 정보 내용의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려워지고, 소셜 플랫폼에서 정치적 군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민들은 사실을 왜곡해 인식하기 쉽다. 이런 시점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사실에 대한 시민들의 오인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노출된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사실 여부를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시민문화 형성 일 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김선호 · 김위근, 2017).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긍정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된다. 먼저, 팩트체크 뉴스도 시의성을 갖기 때문에 저널리스트가 사실확인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제가 되는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찾고 확인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며, 보도 시점에 맞추다보면 잠정적 수준의 사실판단에 머무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 판단 결과가 언론사마다 상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정은령, 2017). 그리고 정치적 사안의 경우 정밀한 사실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Uscinski & Butler, 2013). 현직 언론인의 말을 빌리자면, “완전히,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은 없다.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고 하는 게 대부분이다.... 정말 새빨간 거짓 말을 쓰는 경우란 없다”(마동훈 등, 2013, 97쪽). 또한 뉴스 소비자 특성도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현실적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치 뉴스는 정치적 선유경향에 의해 선택적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존재하며, 적지 않은 미디어 이용자들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정치적 뉴스를 소비한다(Shin & Thorson, 2017; Taber & Lodge, 2006).

미디어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부합하는 팩트체크 뉴스기사는 신뢰하지만, 부합하지 않는 팩트체크 뉴스는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뉴스 이용자가 팩트체크 뉴스를 접한 후 제기된 의혹이나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을

따르는 설득효과(persuasion effect)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Wood & Porter, 2016)도 있지만, 이용자의 주관적 신념을 고착시키거나 심지어 근거없이 제기된 의혹을 부풀리고 확산시키는 부메랑효과(boomerang effect)를 초래한다는 연구(Nyhan & Reifler, 2010)도 보고되고 있다.

팩트체크 저널리즘 도입 초창기에 있는 한국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팩트체크 뉴스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찾기 어렵다. 팩트체크 뉴스보도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미국의 팩트체크 뉴스사례를 소개하면서 저널리즘적 가치를 논의하거나(마동훈 등, 2013), 팩트체크 뉴스 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정은령, 2017)이나 플랫폼 소개(최순욱·윤석민, 2017) 등이며, 미디어 이용자에게 팩트체크 뉴스가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대통령 선거기간 특정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에 대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가 팩트체크 뉴스 보도를 접한 후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온라인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팩트체크 뉴스의 사실판정이 미디어 이용자에게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효과가 미디어 이용자의 지지후보와 의혹제기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팩트체크 뉴스가 추구하는 저널리즘 가치의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살펴본 후, 한국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했다.

## 2. 이론적 논의

### 1)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정의

팩트체크 저널리즘이란 언론이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장이나 가짜뉴스 혹은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 내용상 진위여부를 판정해줌으로써 공중의 현명한 판단을 돕고 정치인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비교적 최근에 부상하게 된 계기는 언론의 게이트키퍼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정치적 정보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Graves, 2016). 선거캠페인 시기의 정치 광고나 선거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제기하는 상대후보에 대한 의혹은 유권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여과장치 없이 직접 전달된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같은 소셜 플랫폼 및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정보 유통이 많아지면서, 이용자들은 언론보도 이외에도 이들 플랫폼에서 여과되지 않은 정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김선호 · 김위근, 2017). 게다가 정보 전달의 속보성이나 전달되는 정보의 다양성 측면에 있어서 이용자 혹은 크라우드가 언론인을 앞지르게 되면서, 언론은 빠른 정보 전달이나 다양한 정보 전달이라는 전통적 기능보다도 믿음만한 정보의 검증(verification)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Hermida, 2015).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미디어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정치적 주장이나 의혹제기가 내용의 진위여부를 언론인이 판단을 내려주는 새로운 저널리즘 보도양식이다.

21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부상한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언론과 정치적 주장의 관계 측면에서 19세기의 정파 저널리즘이나 20세기의 객관주의 저널리즘과 부분적 유사성을 지니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정파 저널리즘처럼 참과 거짓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지만, 그 결론은 언론인 자신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 특히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사실 판단 여부에 집중한다. 19세기 정파 저널리즘이 지배적인 양식이었을 때, 언론은 특정 정파나 정당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기능했다(McGerr, 1986). 즉, 정파 저널리즘 시대에 언론인은 논설을 통해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혹은 정의로운가를 설파하는 것을 주활동으로 삼았다. 옳고 그름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정파 저널

리즘과 형식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파 저널리즘은 언론인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기초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주장을 전달하지만,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언론인 자신이 아닌 정치인이나 유명인사들이 제기한 주장의 진실성 혹은 옳고 그름에 대해 불편부당한 판단을 담고 있다.

정치적 불편부당성을 규범적으로 지향한다는 점에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나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를 공표한다는 점에서 객관주의 저널리즘과 구분된다. 20세기 객관주의 저널리즘 성립이후, 언론은 주장이나 이념을 설파하는 논설 장르를 축소하고 뉴스라는 사실적 정보 전달에 치중하게 되었고, 엔터테인먼트, 허구, 정치선전 등과 구분되는 뉴스의 진실성 혹은 사실성을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본질’(Kovach & Rosenstiel, 2007)로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객관주의 저널리즘은 의견이나 주장도 뉴스로서 구성했다. 취재원의 의견이나 주장을 뉴스로서 인용 보도하는 관행을 발전시키면서, 저널리즘은 그 내용의 진위여부에도 일정부분 관심을 가졌지만,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언 내용의 정확한 전달 및 상충되는 발언들의 균형있는 전달을 규범적으로 강조했다. 이와 달리,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탐사 저널리즘처럼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진실의 편에 선다는 선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Graves, 2016), 발언이나 주장의 사실적·균형적 전달보다는 발언 내용의 진실성 및 도덕적 판단에 주안점을 둔다.

요컨대,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정파 저널리즘의 도덕성 판단과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사실적 정보 전달의 종합(synthesis)이며, 불편부당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옳고 그름에 대해 진실의 편을 들어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 2) 팩트체킹과 정치적 편향성

정치영역에서 ‘사실’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다. 무엇이 사실인가 여부에 대

해서는 정파적 입장에 따라 이견이 존재하며, 정파성이 강한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Shapiro & Bloch-Elkon, 2008). 이와 관련,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정치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정보에 대해 사실과 거짓에 대한 판단을 내려줌으로써 시민들이 정치적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Graves, 2016).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한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팩트체크 뉴스의 생산과정 및 소비과정 속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Amazeen, 2015; Uscinski & Butler, 2013).

첫째, 팩트체킹 대상 선정 과정에서 편향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마동훈 등, 2013; Uscinski & Butler, 2013). 팩트체킹의 대상이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정파로 집중된다면,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정치 캠페인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팩트체킹 대상 선정에 있어서 다양성과 균형성은 여전히 중요한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팩트체킹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이 원칙을 수행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가령, 정치인 A가 정치인 B에 비해 허위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체계적으로 더 많이 하고 또 중대한 사안에 대해 그런 발언을 했다고 가정할 때, 팩트체커는 A의 발언 내용에 대한 팩트체킹을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팩트체크 판정 결과에 있어서도 B의 발언에 비해 A의 발언이 더 많이 '거짓'으로 판정된다면, 팩트체커는 자신의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편향성 시비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사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이 자료를 수집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레이브스(Graves, 2013; 2016)에 따르면 팩트체커는 선거후보자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자료와 복수의 전문가 집단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들 자료의 객관성이 완전한 사실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인덱싱 이론(indexing theory; Bennet, 1990)에 따르면 정부의 공식자료는 한 사회의 주류 엘리트가 합



의한 영역의 자료이기 때문에 주류 엘리트의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팩트체크 뉴스가 의존하는 객관적 자료에 대한 불신은 음모이론 신봉자나 반엘리트주의 성향을 갖는 시민의 정보 처리과정에서 잘 드러난다(Ditto & Lopez, 1992; Sunstein, 2010). 또한 적대적 매체지각(Vallone et al., 1985) 연구에서 잘 나타나듯 중립적인 보도 내용도 정파성이 강한 미디어 이용자에게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사실여부 판정이 바뀔 수 있다(Uscinski & Butler, 2013). 선거의 경우 특정 후보에 대해 제기하는 의혹의 경우 사실여부를 판정하기 쉽지 않거니와, 심지어 의혹제기를 통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5조가 넘는 금액을 퍼주었다”라는 정치적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지원 금액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이 주장은 사실일수도 혹은 거짓일수도 있다. 만약 현금지원만 고려한다면 노무현 정권기간 동안의 대북지원금은 약 1.6조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판정할 수 있지만, 현금지원에 쌀과 식량지원, 김영삼 정권당시의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잔금 등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약 5.7조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도 판정할 수 있다(연합뉴스, 2006). 선거 전략에 따라 의도적으로 사실과 거짓을 혼합하는 정치적 현실에서 팩트체크 뉴스를 통한 사실여부 판정에는 이러한 난점이 있다.

넷째, 정치적 정보처리과정에는 미디어 이용자의 정치적 선유경향이 동기(動機)로 개입된다(Taber & Lodge, 2006). 미디어 이용자는 뉴스정보를 선택적으로 선택·지각·수용하며, 정치적 정보일수록 선택적 선택·지각·수용 정도는 더 강하다. 정치 세계는 시민에게 직접 경험되는 세계도 아니며, 가장 중요한 관심 영역도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치 뉴스는 정치적 선유경향에 의해 선택적으로 소비되며, 미디어 이용자들은 확증편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존재한다(Shin & Thorson, 2017). 팩트체크 뉴스

가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집단이나 정치인에 우호적인 판정을 내리거나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정치집단이나 정치인에 비우호적인 판정을 내리는 경우 팩트체크 뉴스의 사실 판정을 신뢰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불신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미디어 이용자는 자신의 주관적 판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에 순응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판정을 불신하거나 혹은 판정 자체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팩트체크 뉴스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는 팩트체크 뉴스를 통한 사실판정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해외의 경우 팩트체크 뉴스의 사실여부 판정에 대해 정당이나 정치인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Graves & Cherubini, 2017; Uscinski & Butler, 2013). 또한 팩트체크 뉴스 작성기관에 따라 판정결과가 불일치하기도 한다(마동훈 등, 2013). 국내의 경우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실제로 의혹을 검증한 팩트체크 뉴스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에 따르면, 팩트체크 뉴스가 다루는 의혹은 대부분 '사실' 혹은 '거짓'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것이며(마동훈 등, 2013), 심지어 동일한 의혹에 대한 검증결과가 팩트체크 뉴스 보도 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정은령, 2017). 이런 점에서 그레이브스(Graves, 2013)는 팩트체크 뉴스의 역할은 무엇을 사실이라고 판정하는(judge) 것이 아닌 무엇을 사실이라고 “공표하는(publicly decide, p. 18)”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미디어 이용자에게 미치는 팩트체크 뉴스의 효과를 “정치적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 작성자의 판단과 근거제시가 정치적 논란을 접한 미디어 이용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미디어 이용자가 제기된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 뉴스의 입장에 동의할 경우, 저널리스트의 의도대로 근거없는 의혹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한 교정(correction; Wood & Porter, 2016)이 일어나지만, 미디어 이용자가 팩트체크 뉴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저널리스트의 의도와 정반대의 효과를 낳는 부메랑효과(boomerang effect)가 초래된다(Nyhan & Reifler, 2010). 본

연구에서는 팩트체크 뉴스의 사실판정이 이론적·현실적으로 객관적이기 어렵다는 점(Uscinski & Butler, 2013)에서 '교정효과(correction effect)'라는 선행 연구(Fridkin et al., 2015; Wood & Porter, 2016)의 규범적 용어 대신 '설득효과(persuasion effect)'라는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선택하였다.

또한 정치적 사안에서 '완전한 사실'이나 '완전한 거짓'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는 점(Uscinski & Butler, 2013), 그리고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이 논란에 휩싸이기 쉽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사실반 거짓반'으로 판정한 팩트체크 기사에 대한 미디어 이용자의 반응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만약 '사실반 거짓반'으로 판정내린 팩트체크 기사에서 제기된 정치적 의혹이 '사실'(혹은 '거짓')임을 증거하는 자료만 선택적으로 미디어 이용자에게 제시되었다면 미디어 이용자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정치적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의 사실여부 판단방식을 어떻게 실험 처치 하였는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 3) 팩트체크 뉴스효과: 설득효과인가, 아니면 부메랑효과인가?

팩트체크 뉴스가 미디어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설득효과'가설과 '부메랑효과'가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설득효과를 지지하는 연구들(Fridkin et al., 2015; Gottfried et al., 2013; Wood & Porter, 2016)에서는 팩트체크 뉴스를 접한 미디어 이용자는 팩트체크 뉴스의 사실여부 판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정치적 태도나 의견, 신념 등을 바꾼다고 주장하고 있다. 팩트체크 뉴스가 논란이 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판정하는 경우 해당 정치적 의혹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거짓'이라고 판정한 경우 불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는 미국에서 진행된 실증연구들에서도 확인되었다. 프리드킨 등(Fridkin et al., 2015)은 팩트체크 뉴스가 부정적 정치광고에

서 등장한 정치적 의혹을 ‘사실’, ‘거짓’으로 판정하였을 때를 온라인 실험을 통해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팩트체크 뉴스가 정치광고가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을 사실이라고 판정한 경우 실험참여자의 해당 정치광고 평가는 긍정적인 반면, 거짓이라고 판정한 경우에는 정치광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실험에서 주목할 점은 팩트체크 뉴스의 사실여부 판정이 실험참여자의 정치광고 평가에 미치는 효과가 참여자의 정치적 이념성향이나 지지당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우드와 포터(Wood & Porter, 2016)는 정치인의 거짓발언 33개를 대상으로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치인의 소속정당과 실험참가자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상관없이, 실험참가자들은 33개 검증대상 모두에서 팩트체크 뉴스의 거짓판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기법이 아닌 설문조사 기법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는 확인되었다. 고프리드 등(Gottfried et al., 2013)은 반복적 설문조사 자료분석을 통해 팩트체크 사이트를 방문이 많을수록 팩트체크 뉴스에서 다루는 정치지식 습득정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부메랑효과를 지지하는 연구(Flynn, Nyhan, & Reifler, 2017; Garret, Nisbet, & Lynch, 2013; Nyhan & Reifler, 2010, 2015; Thorson, 2016)에 따르면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가 미미하거나 상황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팩트체크 뉴스를 접한 미디어 이용자는 기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정치적 태도나 의견, 신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팩트체크 뉴스를 전용(轉用)한다고 주장한다. 즉 팩트체크 뉴스의 사실여부 판단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도움이 되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인에 해(害)가 되는 경우에는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에 따르지만, 선호하는 정치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자신이 반대하는 정치인에게 득이 되는 판정을 내릴 경우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을 거부하고 도리어 애초의 태도와 신념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부메랑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나이한과 라이플러(Nyhan & Reifler, 2010)의 실험을 언급할 수 있다. 이들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

유’, ‘세금감축’, ‘즐기세포 연구’의 세 이슈와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정치정보를 거짓으로 판정한 팩트체크 뉴스를 제공한 후 응답자가 보유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테스트하였다. 실험결과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이 실험참여자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설득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정치적 성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거짓이라고 판정한 정보에 대해 더욱 강한 신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의 실험연구에서도 나이한과 라이플리의 실험결과는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사한 실험 연구로는 Flynn, Nyhan, & Reifler, 2017; Garret, Nisbet, & Lynch, 2013; Nyhan & Reifler, 2015; Thorson, 2016 참조).

부메랑효과는 트위터 공간에서 팩트체크 뉴스가 어떻게 공유되고 전파되는가에 대한 관측연구(observational study)에서도 확인되었다. 신과 쏘슨(Shin & Thorson, 2017)은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기간 트위터를 통해 누가 어떤 팩트체크 뉴스를 공유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트위터에서 공유된 팩트체크 뉴스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정파성이 뚜렷한 트위터 이용자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거나 상대 후보자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팩트체크 뉴스의 선택적 공유(selective sharing) 행동이 드러났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대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는 팩트체크 뉴스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팩트체크 뉴스 작성자에 대한 적대적 시각은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공화당 지지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팩트체크 뉴스효과에 대한 논란은 뉴스 이용자가 정치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설득효과가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팩트체크 뉴스를 통한 미디어 이용자의 학습능력과 합리적 판단(Delli Carpini & Keeter, 1996; Fishkin, 1997)을 강조하는 반면, 부메랑효과가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미디어 이용자의 정치적 정보처리가 정치적 동기(Taber & Lodge, 2006)에 따라 편향되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설득효과가설이 옳다면, 팩트

체크 뉴스가 확산될수록 시민들의 정치적 정보처리와 의사결정과정은 사실과 합리적 설득과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팩트체크 뉴스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의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반면, 부메랑효과가설이 옳다면, 팩트체크 뉴스의 확산은 미디어 이용자의 정치적 양극화(political polarization)를 심화시키거나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대한 불신만 부추겨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Uscinski & Butler, 2013).

#### 4)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실시된 팩트체크 뉴스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경험적 연구를 위한 시도이다. 팩트체크 뉴스의 효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선 국내 미디어 이용자에게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정치적 의혹에 대해 팩트체크 뉴스가 사실로 판정한 경우 미디어 이용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다 신뢰하는 반면 거짓이라고 판정한 경우 제기된 의혹을 보다 불신할 것이며, 이러한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는 이용자의 지지후보나 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에 대해 정치적 의혹을 제기한 상황인가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 팩트체크 뉴스유형의 주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팩트체크 뉴스유형과 지지후보, 정치적 의혹제기 상황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국내 미디어 이용자에게서 부메랑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미디어 이용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제기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판정한 팩트체크 뉴스를 접한 경우 제기된 의혹을 더욱 신뢰하는 반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가 제기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판정한 팩트체크 뉴스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혹을 더욱 불신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디어 이용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거짓이라고 판정한 팩트체크 뉴스

를 접한 경우 제기된 의혹을 더욱 불신하는 반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거짓이라고 판정한 팩트체크 뉴스를 접한 후에는 제기된 의혹을 더욱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다시 말해, 팩트체크 뉴스유형과 지지후보, 정치적 의혹제기 상황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는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팩트체크 뉴스유형의 주효과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팩트체크 뉴스가 설득효과와 부메랑효과 중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팩트체크 뉴스의 사실여부 판정을 접한 미디어 이용자는 정치적 선유경향과 무관하게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에 맞게 자신의 입장을 변화시키는가?(설득효과) 아니면 정치적 선유경향과 부합할 경우에만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을 수용하는가?(부메랑효과)

또한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해 '사실반 거짓반' 판정을 내린 팩트체크 뉴스의 효과는 어떻게 구체화(specify)될 수 있을까? 팩트체커는 '사실보다는 거짓으로 의심되는 주장'을 팩트체크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팩트체크 결과는 '사실'보다는 '거짓'으로 혹은 '사실반 거짓반'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Graves, 2016). 실제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2017)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조사된 팩트체크 뉴스에 대한 판정 결과 '거짓'으로 판정된 경우가 25.4%, '사실'로 판정된 경우가 8.4%였다. 팩트체크 뉴스 판정의 대부분은 '대체로 거짓'(24.3%), '대체로 사실'(13.6%), '사실반 거짓반'(22.0%)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선행연구(예를 들어, Fridkin et al., 2015; Nyhan & Reifler, 2010; Wood & Porter, 2016)에서는 구체적인 판정, 특히 정치적 의혹을 '거짓'으로 판정내린 팩트체크 뉴스만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팩트체크 뉴스가 정치적 의혹해소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팩트체크 뉴스에서 또 다른 중요 판정인 '사실반 거짓반'에 대한 미디어 이용자 반응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실반

거짓반'으로 판정내린 팩트체크 뉴스의 효과는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2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2: 팩트체크 뉴스의 '사실반 거짓반' 판정을 접한 미디어 이용자는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 3. 연구방법

#### 1) 연구표본 및 실험과정

본 연구의 연구표본은 만 19세 이상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에 참여했던 대한민국 국민 1,092명이다. 실험조건별 온라인 실험참가자는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성·연령·지역 정보와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득표율(문재인 투표자 40%, 홍준표 투표자 24%, 안철수 투표자 20%, 유승민 투표자 6%, 심상정 투표자 6%, 기타 후보 투표자 4%)을 기준으로 온라인 조사 전문업체 마켓링크가 보유한 온라인 패널 중에서 할당표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가자가 투표 행위를 통해 지지했던 대통령 후보를 '정치적 선유경향'이라고 간주하였다.<sup>1</sup> 설문은 2017년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sup>2</sup>

실험에서 사용된 의혹제기 상황과 팩트체크 기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

---

1 정치적 선유경향이 지지 후보를 통해 온전히 파악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치적 선유경향은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 하나이지, 유일한 결정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후보자 사이의 정치적 의혹제기 상황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치적 선유경향이 지지후보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지지 후보를 정치적 선유경향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볼 수 있다.

2 본 연구가 정치적 의혹을 다루고 있으며, 실험참가자가 접한 정치적 의혹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잠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연구윤리 상황 및 현행 선거법 위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선거가 끝난 후 표본을 수집하였다.



연구소에서 수집·운영하는 ‘SNU팩트체크’ 사이트(<http://factcheck.snu.ac.kr>)에서 선택한 후 실험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논란의 대상이 되기 쉬운 정치적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의 사실여부 판정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본 실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논란에 대해 중립적인 판정인 ‘사실반 거짓반’으로 판정한 팩트체크 기사들을 선정하였다. 이후 지난 대통령 선거의 유력후보자인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로 주목받았던 홍준표, 안철수 후보 사이의 정치적 의혹제기 상황 네 가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의혹제기 상황은 (1) ‘문재인의 홍준표 의혹제기’, (2) ‘문재인의 안철수 의혹제기’, (3) ‘홍준표의 문재인 의혹제기’ (4) ‘안철수의 문재인 의혹제기’의 네 가지 상황이었다(구체적인 실험처치 자극물은 저자에게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각 상황별 ‘사실반 거짓반’으로 판정한 팩트체크 기사를 중심으로 ‘사실’이라고 판정하는데 사용된 증거들만 골라 ‘사실’판정 팩트체크 기사를, ‘거짓’이라고 판정하는데 사용된 증거들만 선택하여 ‘거짓’판정 팩트체크 기사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즉 동일한 정치적 의혹에 대해 ‘사실’판정 팩트체크 기사는 사실판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들만 제시한 기사를 의미하며, ‘거짓’판정 팩트체크 기사는 거짓판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들만 제시한 기사를 의미한다. 반면 ‘사실반 거짓반’으로 판정된 팩트체크 기사는 사실판정 근거와 거짓판정 근거 모두를 포함한 기사를 뜻한다. 이렇게 선정된 세 종류의 팩트체크 기사들은 편집과정을 거쳐 분량과 기사제시 방식을 유사하게 통일시켰다(구체적인 실험처치 자극물은 저자에게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온라인실험은 총 2단계로 진행되었다. 우선 첫 단계에서 실험참가자들은 선거운동기간 어떤 후보가 다른 후보를 향해 제기한 주장(‘의혹제기 상황’) 중 하나를 읽도록 요구받았다. 실험처치된 의혹제기 상황 네 가지 중 하나를 무작위로 제시한 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험참가자의 주관적 동의수준을 측정하였다. 주관적 동의수준 변수에 대한 자세한 측정방식은 ‘변수측정’ 섹션에 서술되어 있다.

이후 실험참가자들은 제시받은 의혹제기 상황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를 제공받았다. 앞서 서술하였듯, 실험참가자는 (1) '사실반 거짓반', (2) '사실', (3) '거짓'으로 판정내린 팩트체크 뉴스기사 중 하나에 무작위로 노출되었다. 제기된 의혹을 '사실반 거짓반'을 최종판정으로 제시한 팩트체크 기사에서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 근거와 거짓인 근거 모두를 제시하였다. 반면,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판정한 기사에서는 '사실'임을 지지하는 근거만을, '거짓'으로 판정한 기사에서는 '거짓'임을 지지하는 근거만을 제시하였다. 팩트체크 기사제공 후 앞에서 측정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험참가자의 주관적 동의수준을 반복측정하였다.

총 12가지의 실험조건에 무작위로 배치된 실험참가자수와 각 조건별 후보지지자 분포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의혹제기 상황과 팩트체크 기사유형에 따른 12개의 실험조건

의혹제기 상황	팩트체크 기사유형			총합
	거짓	사실반 거짓반	사실	
문재인의 홍준표 의혹제기	93 (37/21/22/13)	92 (36/21/19/16)	94 (35/21/19/19)	279 (108/63/60/48)
문재인의 안철수 의혹제기	87 (35/23/17/12)	91 (36/22/17/16)	91 (38/21/19/13)	269 (109/66/53/41)
홍준표의 문재인 의혹제기	91 (34/21/17/19)	86 (34/21/18/13)	94 (40/23/17/14)	271 (108/65/52/46)
안철수의 문재인 의혹제기	91 (37/22/19/13)	91 (38/24/17/12)	91 (37/21/20/13)	273 (112/67/56/38)
총합	362 (143/87/75/57)	360 (144/88/71/57)	370 (150/86/75/59)	1,092 (437/261/221/173)

주. 괄호 속의 숫자는 순서대로 (문재인 지지자/홍준표 지지자/안철수 지지자/기타후보 지지자)를 의미.

## 2) 변수측정

### (1) 종속변수: 제기된 의혹에 대한 주관적 동의수준

본 연구에서는 팩트체크 기사유형이 팩트체크 기사가 다루고 있는 정치적 의혹에 대한 실험참여자의 주관적 동의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참여자에게 “귀하는 [제기된 의혹]이라는 [후보자이름] 후보의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한 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동의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1=‘매우 반대한다’; 7=‘매우 찬성한다’)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주관적 동의수준은 팩트체크 기사를 제시이전( $M=4.00, SD=1.79$ )과 제시이후( $M=3.93, SD=1.79$ )로 2차례 반복 측정되었다( $r=.80, p<.001$ ).

### 2) 실험요인: 팩트체크 기사유형, 의혹제기 상황, 지지후보

본 연구에서는 팩트체크 기사유형에 따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험참가자의 동의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의혹제기 상황조건과 유권자의 지지후보라는 조절변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팩트체크 기사유형’, ‘의혹제기 상황’, ‘지지후보’의 세 요인을 이용해 의혹에 대한 실험참여자의 주관적 동의수준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미 제시한 <표 1>에서 실험요인별 실험참여자를 살펴볼 수 있다.

## 3) 분석방법

이번 실험 디자인에서는 팩트체크 기사유형(3수준), 의혹제기 상황(4수준), 지지후보(4수준) 총 세 개의 개체간 요인과 반복 측정된 제기의혹에 대한 주관적 동의수준 시점변화(팩트체크 기사제공 이전과 이후)의 개체내 요인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가 팩트체크 기사유형이 제기의혹에 대한 주관적 동의수준 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이 효과가 어떻게 조절변수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두 시점의 주관적 동의수준 변화점수 (change score; Allison, 1990)를 세 개의 개체간 요인으로 설명하는 3원분산분석(three-way analysis of variance)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또한 세 개의 개체간 요인들을 교차하여 생긴 48개의 실험조건별로 제기의혹에 대한 주관적 동의수준의 변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데이터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효과크기(effect size, ES) 측정치인 코헨(Cohen's, Dunlap et al., 2008)를 비교하였다.

## 4.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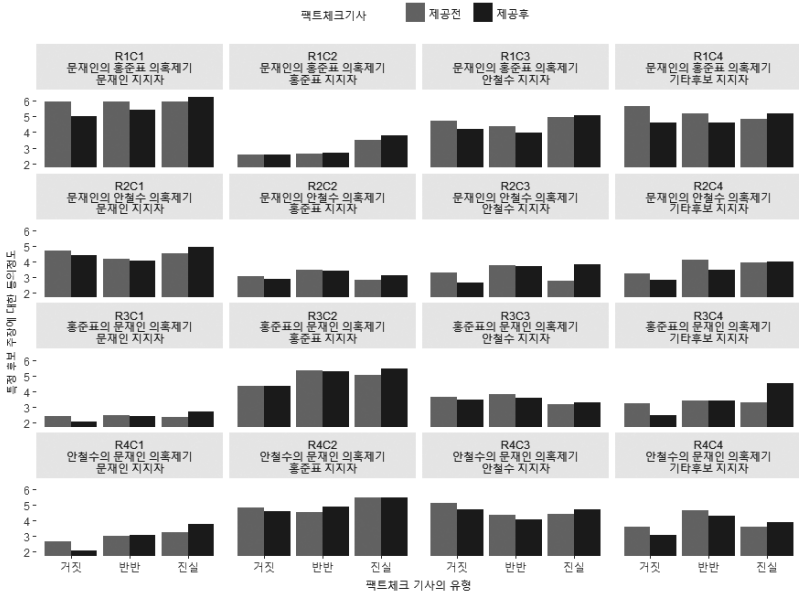
### 1) 기술통계분석

본 실험에서는 총 3개의 개체간 요인(의혹제기 상황, 지지자, 팩트체크 기사 유형)과 1개의 개체내 요인(기사제시 전후)에 따라 팩트체크 기사에서 점검하는 의혹에 대한 주관적 동의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각 요인의 수준에 따라 실험참여자의 주관적 동의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아래의 <그림 1>(자세한 통계치는 저자에게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잘 나타나듯 전반적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기사의 유형과 기사제시 전·후에 상관없이 주관적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 지지자의 경우 문재인 후보가 다른 후보에 대해 제기한 의혹에 대한 동의수준(<그림 1>의 R1C1, R2C1)은 다른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 제기한 의혹에 대한 동의수준보다 높은 모습이었다(<그림 1>의 R3C1, R4C1). 반면 홍준표 후보 지지자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동의수준(<그림 1>의 R1C2)이 매우 낮았지만,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 제기한 의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으며(<그림 1>의 R3C2), 이는 안철수 후보 지지자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그림 1>의 R1C3와 R4C3 비교). 기타후보를 지지

했던 실험참여자의 경우 문제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경우에서만 전반적으로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1〉의 R1C4).

그림 1. 의혹제기상황, 지지후보, 팩트체크기사유형별 제기된 의혹에 대한 동의수준 변화



그러나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팩트체크 기사의 유형별 응답자의 동의 수준 변화다. 의혹제기상황과 지지후보에 따른 16개 상황 모두에서 팩트체크 기사유형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첫째, 팩트체크 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동의수준은 감소하였다. 둘째, 팩트체크 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진실’이라고 판정한 경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동의수준은 증가했다. 셋째, 팩트체크 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진실반 거짓반’으로 모호하게 판정한 경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수준은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몇몇 조건에서는 미미하게 증가하는 모습(〈그림 1〉의 R4C1, R1C2, R3C2, R4C2 등)이었다.

## 2) 의혹제기 상황과 지지후보자별 팩트체크 기사유형의 태도변화 효과

팩트체크 기사의 유형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주관적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그 효과가 의혹제기 상황과 지지후보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팩트체크 기사에 따른 태도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사가 제시된 후에 측정한 주관적 동의수준에서 제시되기 이전의 점수를 빼준 '변화점수'를 구한 후(Allison, 1990), 변화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팩트체크 기사유형, 의혹제기 상황, 지지후보자의 제 개체간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3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테스트결과는 <표 2>와 같다.<sup>3</sup>

표 2. 팩트체크 기사 제공 후 제시된 의혹에 대한 동의수준 변화

	df	F	$r^2_{\text{partial}}$
독립변수			
팩트체크 기사유형(3집단)	2	56.87***	0.10
조절변수			
의혹제기 상황(4집단)	3	3.52*	0.01
지지후보(4집단)	3	2.42	0.01
2원 상호작용			
의혹제기 상황×지지후보	9	1.25	0.01
기사유형×의혹제기 상황	6	0.68	<.01
기사유형×지지후보	6	2.64*	0.01
3원 상호작용			
의혹제기 상황×기사유형×지지후보	18	1.22	0.02
오차	1,044	(1.12)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괄호안은 오차의 평균제곱합을 의미함.

3 본 연구에서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투입되는 변수들(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정치지식, 정치관심도, 정치적 이념성향, 정치참여도, 정치효능감, 뉴스미디어 이용량 등)도 측정하였으며, 이들 변수들을 공변량(covariate)으로 통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해도 <표 1>의 결과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실험연구결과의 간결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변량의 효과까지 고려한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결과를 보고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공변량 측정방식과 공분산분석 추정결과가 궁금한 독자는 저자들에게 연락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2〉에서 나타나듯,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3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F(18, 1044) = 1.22, p = n.s.$ ). 또한 두 조건변수들(의혹제기 상황과 지지 후보) 사이에서( $F(9, 1044) = 1.25, p = n.s.$ ), 그리고 독립변수인 팩트체크 기사 유형과 의혹제기 상황 사이에서도( $F(6, 1044) = .68, p = n.s.$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2원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논문의 핵심 독립변수인 기사유형과 지지후보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 $F(6, 1044) = 2.64, p < .05, n^2_{partial} = .01$ )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팩트체크 기사유형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미디어 이용자의 동의수준변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디어 이용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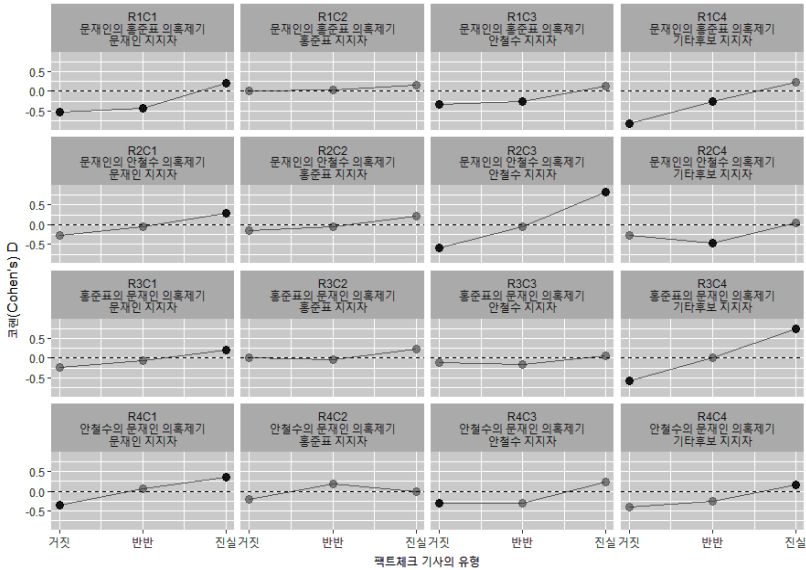
주효과의 경우도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2〉에서 나타나듯 팩트체크 기사유형은 의혹에 대한 동의수준변화에 매우 강력한 주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F(2, 1044) = 56.87, p < .001, n^2_{partial} = .10$ ). 또한 의혹제기 상황에 따라라도 동의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3, 1044) = 3.52, p < .05, n^2_{partial} = .01$ ).

팩트체크 기사제공에 따라 제기된 의혹에 대한 태도변화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티검증을 이용해 전체 48개 실험조건(팩트체크 기사 유형3개×의혹제기 상황 4집단×지지후보 4집단)에 따라 팩트체크 기사전후의 주관적 동의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각 조건별 대응표본 티검증 결과와 효과크기(Cohen's D)를 계산한 결과는 〈그림 2〉에서 찾을 수 있다.

팩트체크 기사전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인 조건의 개수는 전체 48개 조건들 중 총 18개였다(〈그림 2〉에서 진하게 표현된 코헨D의 값; 약 38%). 팩트체크 기사유형별로 구분하면, ‘거짓’으로 판명한 팩트체크 기사의 경우 전체 18개 조건들 중 7개(약 44%, 코헨D 범위  $-.81 \sim -.31$ ), ‘진실’이라고 판명한 팩트체크 기사의 경우 전체 18개 조건들 중 7개(약 44%, 코헨D 범위

.17~.82), '반반'이라고 판명한 팩트체크의 경우 전체 18개 조건들 중 4개(약 25%, 코헨D 범위 -.48~-0.26)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

그림 2. 실험조건별 팩트체크기사 제시에 따른 효과크기 변화패턴



주. 진하게 표시된 코헨 D는 대응표본 티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5$ ) 평균차이가 나타난 경우를, 흐리게 표시된 코헨 D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평균차이가 나타난 경우를 의미함.

즉 팩트체크기사가 제기된 의혹을 '거짓' 혹은 '진실'이라고 판정한 경우 논란이 되는 의혹에 대해 팩트체크기사의 판정방향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미디어 이용자의 주관적 동의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설득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팩트체크 기사가 '사실반 거짓반'으로 모호한 판정을 내린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태도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감소하지만, 미디어 이용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제기된 의혹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연구문제1’과 관련하여 <표 2>와 <그림 2>의 결과는 국내 미디어 이용자에게 나타나는 팩트체크 뉴스효과는 부메랑효과가 아닌 설득효과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의 결과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듯, 홍준표 후보 지지자를 제외한 모든 실험참여자 집단에서 팩트체크 뉴스에서 ‘사실’판정을 내릴 경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주관적 동의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거짓’판정을 내릴 경우 제기된 의혹에 대한 동의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홍준표 후보 지지자에게서는 팩트체크 뉴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집단에서는 설득효과는 물론 부메랑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적어도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네 가지 정치적 의혹제기 상황의 경우, 팩트체크 뉴스는 국내의 미디어 이용자에게 설득효과를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연구문제2’와 관련하여 홍준표 후보 지지자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 참여자들에게서 ‘사실반 거짓반’ 판정을 내린 팩트체크 뉴스는 약하지만 제기된 의혹을 불신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모호한 판정을 내린 팩트체크 뉴스는 ‘거짓’판정을 내린 팩트체크 뉴스보다는 약하지만 이와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새로운 저널리즘 보도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팩트체크 뉴스가 정치적 의혹을 접한 미디어 이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의 의혹제기에 대해 각각 ‘사실반 거짓반’, ‘사실’, ‘거짓’판정을 내린 팩트체크 뉴스의 효과가 의혹제기 상황(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는가?)과 미디어 이용자의 정치 성향(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에 따라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주목할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흥준표 후보 지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디어 이용자가 팩트체크 뉴스에 포함된 판정결과를 수용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는 설득효과(Fridkin et al., 2015; Wood & Porter, 2016)를 발견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가 정치적 의혹제기가 발생한 상황이나 미디어 이용자의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팩트체크 뉴스가 새로운 저널리즘 보도양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팩트체크 뉴스가 잘못된 정보를 교정·차단하고 정치인의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막을 수 있을가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적지 않았다(Uscinski & Butler, 2013). 실제로 미국에서 수행된 상당수의 실증연구에서는 팩트체크 뉴스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신념을 강화시키고 심지어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부메랑효과를 발견하기도 했다(Nyhan & Reifler, 2010). 그러나 본 실험은 팩트체크 뉴스가 정치적 의혹을 접한 국내의 미디어 이용자에게 미친 효과가 부메랑효과 보다는 설득효과에 가까움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팩트체크 뉴스의 부메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선 국내 미디어 이용자가 해외,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미디어 이용자와 다르기 때문일까? 다시 말해 해외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 미국의 미디어 이용자는 정치적 동기를 기반으로 정치적 정보를 처리하는 반면(Nyhan & Reifler, 2010; Taber & Lodge, 2006), 국내의 뉴스 이용자는 정치적 동기를 배제하고 정치적 정보를 처리한 것일까?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 가능성은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수·진보 유권자의 뿌리깊은 갈등,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분화된 신문산업을 생각해 볼 때(민희·이원태, 2005; 손석춘, 2011), 국내 미디어 이용자가 딱히 미국의 미디어 이용자에 비해 뉴스를 접하고 이해할 때 정치적 동기를 개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실험참가자들이 실험자극으로 사용된 팩트체크 뉴스

의 보도기관을 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미디어 이용자가 뉴스를 접할 때, 언론사 정보는 보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단서(cue)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언론사 정보라는 중요단서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미디어 이용자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정치적 동기가 개입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실험의 배경이 선거라는 점, 그리고 정치적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후보자’였다는 점에서, 미디어 이용자가 팩트체크 뉴스를 접하고 이해할 때 정치적 동기가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실험자극으로 택한 정치적 의혹이 미디어 이용자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았기 때문에 부메랑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상술하였듯, 실험에 사용된 정치적 의혹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자료를 찾는가에 따라 ‘거짓’으로 혹은 ‘사실’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Uscinski & Butler, 2013). 일반시민 입장에서 이렇듯 애매한 정치적 의혹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실험 참여자의 관점에서 제시받은 정치적 의혹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체성을 결정짓는 필수적인 정치적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 (Taber & Lodge, 2006), 제시받은 정치적 의혹에 대한 심리적 개입수준이 낮으면 정치적 동기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부메랑효과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에서 사용하는 정치적 의혹은 정치적으로 격렬하게 논의되거나(예를 들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정치적 신념의 근간을 형성하는(예를 들어 ‘세금인하나 ‘줄기세포’) 이슈들인 경우가 많은 반면(Nyhan & Reifler, 2010의 실험자극참조), 설득효과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거나 혹은 단순한 사실확인이 가능한 이슈들인 경우가 많다(Wood & Porter, 2016의 실험자극참조). 이번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실험자극으로 사용된 정치적 의혹들은 모두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격렬한 정

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의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실험참여자 입장에서 제시받은 의혹에 대한 신뢰여부는 자신의 정치적 선택이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정보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팩트체크 뉴스가 다루고 있는 정치적 의혹에 대한 미디어 이용자의 개입정도가 팩트체크 뉴스효과의 방향성을 판가름하는지 여부는 향후 연구를 통해 실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연구에서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사실반 거짓반’으로 판정한 팩트체크 뉴스의 효과가 ‘거짓’으로 판정한 팩트체크 뉴스의 효과에 가깝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치적 의혹에 대해 본질적으로 사실여부를 명확하게 판가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팩트체크 뉴스에서는 논란이 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사실반 거짓반’ 판정을 내리기 쉽다. 그러나 가장 많이 나타나는 판정방식임에도 미국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잘못된 정치적 정보에 대해 ‘거짓’판정을 내린 팩트체크 뉴스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거짓된 정보가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팩트체크 뉴스의 출발이었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는 나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미디어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모호한 판정의 팩트체크 뉴스 효과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은 팩트체크 뉴스의 모호한 판정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왜 팩트체크 뉴스의 ‘사실반 거짓반’ 판정은 ‘거짓’ 판정을 내린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질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 Rozin & Royzman, 2001)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즉 같은 양의 정보라도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보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반 거짓반’ 판정을 내린 팩트체크 뉴스를 접한 미디어 이용자는 거짓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다. 부정성 편향은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심리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이 결과는 정치인에 대한 미디어 이

용자의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도 설명가능하다. 정치인을 불신하는 미디어 이용자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Diggo & Lopez, 1992; Taber & Lodge, 2006).

셋째, 홍준표 후보 지지자의 경우 팩트체크 뉴스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이론적 함의와 현실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본 실험결과는 자신의 정치적 태도에 합치되지 않는 메시지를 접했을 때 진보적 유권자에 비해 보수적 유권자에게서 심리적 저항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해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Lewandowsky et al., 2012). 실제로 팩트체크 뉴스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도 연구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를 확인한 우드와 포터(Wood & Porter, 2016)의 연구에서도 진보적 유권자에 비해 보수적 유권자에게서 설득효과 크기가 약하게 나타났으며, 부메랑효과를 실증한 나이한 등의 연구(Nyhan & Reifler, 2010; Shin & Thorson, 2017)에서도 보수적 유권자의 부메랑효과가 진보적 유권자의 부메랑효과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탄핵 직후 실시된 2017년 대선 당시에는 과거 선거보다 많은 후보들이 출마했고, 정당별 이념적 지향도 불분명했다. 다만, 홍준표 후보 지지자의 경우는 다른 후보 지지자와 달리 보수 색채가 분명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에 대한 본 연구 결과가 해외 연구 결과와 상이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를 실증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먼저, 본 연구에서 다른 팩트체크 뉴스에는 텍스트 정보만을 제시하였다. 가렛 등(Garrett et al., 2013)의 연구가 잘 보여주듯, 팩트체크 뉴스의 효과는 뉴스 내용은 물론 뉴스와 같이 제시되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맥락정보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들의 실험에 따르면 무슬림에 대한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사진이 함께 제공된 팩트체크 뉴스는 무슬림 관련 왜곡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신념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본 실험에서는 팩트체크 뉴스기사에 텍스트 정보만을 제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진

이나 동영상, 팩트체크 판정 아이콘 등 시각적 요소들을 철저히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미디어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뉴스환경과 매우 다르다. 향후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자의 뉴스이용 환경과 유사한 방식의 실험조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보다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을 높인 실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실험연구의 특성상 실험에 참여한 모든 미디어 이용자들은 무작위로 배치된 팩트체크 뉴스에 강제노출(forced exposure)되었는데, 이는 현실환경에서 나타나는 선택적 뉴스 노출과 다르다. 여느 뉴스와 마찬가지로 팩트체크 뉴스 역시 이용자의 선택적 노출 경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Shin & Thorson, 2017). 실제로 국외의 선행연구에서 잘 나타나듯, 팩트체크 뉴스를 주로 접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일 확률이 높으며, 팩트체크 뉴스를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사람들 역시도 민주당 지지자일 확률이 더 높다(Shin & Thorson, 2017). 즉 우리가 실험을 통해 확인한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가 현실의 미디어 환경에서 어느 정도나 실현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나 빅데이터 연구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팩트체크의 주체에 따른 효과 역시 살펴보지도 못했다. 미국의 팩트체크 뉴스보도 주체는 '워싱턴포스트'나 '탐과베이타임즈'와 같은 기존 언론사도 존재하지만, '아넨버그 공공정책 센터(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나 '책임정치 연구소(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등의 비정규적 조직도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의 팩트체크 뉴스 보도 주체는 기존의 신문사·방송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실험의 경우, 팩트체크 뉴스보도 언론사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미디어 이용자는 팩트체크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팩트체크 뉴스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맥락정보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의 신문 매체는 보도의 내용과 신문이용자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점에서 매우 강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연구는 미디어 정보원과 정보원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가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할 필

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판단할 때, 진행시점이 선거가 종료되고 당선자가 확정된 후 진행되었다는 점과 투표 기권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도 잠재적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에서 정치적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자극의 검증력(statistical power)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약 23%에 달하는 기권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본 연구의 약점이다. 정치적 의혹과 같은 부정적 정치뉴스가 정치적 냉소주의를 야기시키고(Cappella & Jamieson, 1997), 심지어 투표율을 저하시킨다는 해외의 보고사례(Ansola-behere, Iyengar, Simon, & Valentino, 1994)를 감안할 때, 무당파나 중도파들이 어떻게 팩트체크 뉴스의 관정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연구의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치적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결과가 국내 미디어 이용자의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제적 가치를 갖는다. 팩트체크 뉴스는 가짜 뉴스, 루머 등의 거짓 정보에 대한 저널리즘적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팩트체크 뉴스가 추구하는 이상이 현실에서 구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조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점에서 팩트체크 뉴스가 미디어 이용자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본 연구를 시작으로 팩트체크 뉴스의 가치와 잠재적 한계점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선호 · 김위근 (2017) 팩트체크를 체크한다. <미디어 이슈>, 3권 7호. 한국언론진흥재단.
- 마동훈 · 오택섭 · 김선혁 (2013). <저널리즘 공공성 실현을 위한 한국형 팩트체크 모델 연구>. 서울: 한국언론재단
- 민희 · 이원태 (2015).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미디어 이용. <한국정당학회보>, 14권 1호, 157-175.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7). SNU팩트체크, 숫자로 본 19대 대통령 선거. <http://factcheck.snu.ac.kr/documents/40>
- 손석춘 (2011). 한국의 미디어 집중과 여론 다양성의 위기. <한국언론정보학보>, 56권, 7-25.
- 정은령 (2017). 팩트체크 뉴스 의미와 한계. <관훈저널>, 143(2017 여름), 19-25.
- 최순욱 · 윤석민 (2017). 협업형 사실검증 서비스의 의의와 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4권 2호, 173-205.
- 황용석 · 권오성 (2017).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16권 1호, 53-101.
- Allison, P. D. (1990). Change scores as dependent variables in regression analysis. *Sociological Methodology*, 20, 93-114.
- Ansolabehere, S., Iyengar, S., Simon, A., & Valentino, N. (1994). Does attack advertising demobilize the elector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4), 829-838.
- Amazeen, M. A. (2015). Revisiting the epistemology of fact-checking. *Critical Review*, 27(1), 1-22.
- Bennett, W. L. (1990). Toward a theory of press-state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mmunication*, 40(2), 103-127.
- Cappella, J. N., & Jamieson, K. H. (1997). *Spiral of cynicism: The press and the public g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elli-Carpini, M. X., & Keeter, S. (2005).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itto, P. H., & Lopez, D. F. (1992). Motivated skepticism: Use of differential decision criteria for preferred and nonpreferred conclu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4), 568-584.
- Dunlap, W. P., Cortina, J. M., Vaslow, J. B., & Burke, M. J. (1996). Meta-analysis of experiments with matched groups or repeated measures designs. *Psychological Methods*, 1(2), 170-177.
- Hermida, A. (2015) Nothing but the truth. In M. Carlson & Lewis, S. (Eds.), *Boundaries of journalism* (pp. 37-50), London: Routledge.
- Fishkin, J. S. (1997). *The voice of the peop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lynn, D. J., Nyhan, B., & Reifler, J. (2017). The nature and origins of misperceptions: Understanding false and unsupported beliefs about politics. *Political Psychology*, 38, 127-150.
- Fridkin, K., Kenney, P. J., & Wintersieck, A. (2015). Liar, liar, pants on fire: How fact-checking influences citizens' reactions to negative advertising. *Political Communication*, 32(1), 127-151.
- Garrett, R. K., Nisbet, E. C., & Lynch, E. K. (2013). Undermining the corrective effects of media-based political fact checking? The role of contextual cues and naïve theory. *Journal of Communication*, 63(4), 617-637.
- Gottfried, J. A., Hardy, B. W., Winneg, K. M., & Jamieson, K. H. (2013). Did fact checking matter in the 2012 presidential campaig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7(11), 1558-1567.
- Graves, L. (2016) *Deciding what's true: The rise of political fact-checking in American jour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raves, L., & Cherubini, F. (2017). *Digital news project 2016*. Reuters Institute.
- Kovach, B. & Rosenstiel, T. (2007) *The elements of journalism*.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Lewandowsky, S., Ecker, U. K. H., Seifert, C. M., Schwarz, N., & Cook, J. (2012). Misinformation and its correction.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13(3), 106-131.
- McGerr, M. (1986) *The decline of popular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yhan, B., & Reifler, J. (2010). When corrections fail: The persistence of political misperceptions. *Political Behavior*, 32(2), 303-330.
- Nyhan, B., & Reifler, J. (2015). The effect of fact-checking on elites: A field experiment on U.S. State legislato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3), 628-640.
- Patterson, T. & Seib, P. (2005) Informing the public. In G. Overholser & K. H. Jamieson (Eds.), *The press* (pp. 189-21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zin, P., & Royzman, E. B. (2001). Negativity bias, negativity dominance, and contag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4), 296-320.
- Shapiro, R. & Bloch-Elkon (2008) Do the facts speak for themselves? Partisan disagreement as a challenge to democratic competence, *Critical Review*, 20(1-2): 115-139.
- Shin, J., & Thorson, K. (2017). Partisan selective sharing: The biased diffusion of fact-checking messages on social media. *Journal of Communication*, 67(2), 233-255.
- Sunstein, C. R. (2010). *On rumours*. London, UK: Penguin.
- Taber, C. S., & Lodge, M. (2006). Motivated skepticism in the evaluation of political belief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3), 755-769.
- Thorson, E. (2016). Belief echoes: The persistent effects of corrected misinform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33(3), 460-480.
- Uscinski, J. E., & Butler, R. W. (2013). The epistemology of fact checking. *Critical Review*, 25(2), 162-180.
- Vallone, R. P., Ross, L., & Lepper, M. R. (1985) The hostile media phenomenon: Biased Perception and Perceptions of Media Bias in Coverage of the "Beirut Massac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577-585.
- Wood, T., & Porter, E. (2016). The elusive backfire effect: Mass attitudes' steadfast factual adherence.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2819073>

최초투고일 2017.11.30.  
 논문수정일 2018.01.09.  
 게재확정일 2018.01.16.

## Abstract

# The Effects of Fact-check News on Political Allegations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Persuasion or Boomerang Effect?

Sonho Kim

Senior Researcher, Korea Press Foundation

Young Min Baek

Associate Professor,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relying on a randomized experimental design, investigates the ways in which fact-checking news influences voters' perception on a candidate's allegation on opposing candidates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Basically, our experiment consists of two stages. At the first stage, after being exposed to a candidate's allegation on a competing candidate, participants' perception on the allegation was measured: (1) candidate Moon's allegation on candidate Ahn, (2) candidate Moon's allegation on candidate Hong, (3) candidate Ahn's allegation on candidate Moon, and (4) candidate Hong's allegation on candidate Moon. At the second stage, participants were exposed to one of three types of fact-checking news, (1) "half true," (2) "true," and (3) "false"; and then their perception on the allegation was repeatedly measured. With these two manipulated factor, we consider one observed factor, that is, "chosen candidate," (1) candidate Moon, (2) candidate Hong, (3) candidate Ahn, and (4) other minor candidates. Results of three-way analysis of variance explaining the change score of participants' perception on the exposed allegation revealed that fact-checking news succeeded to change participants' perception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the fact-checking news judgment. Interestingly, participants exposed to fact-checking news judging "half true" thought the allegation was "false" rather than "true," indicating news audience holds strong negativity bias towards fact-checking news' judgment.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s are provided.

## KEYWORDS

fact-checking news • persuasion effect • boomerang effect • negativity bias • journalism value • candidate's allegation